

더 나은 경북을 만들기 위한 열린 의회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강만수 의원 외 11명)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강만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84
----------	-----

발의연월일 : 2024. 1. 15.

발 의 자 : 강만수·박영서·황명강
김희수·김일수·박선하
이철식·손희권·김용현
임기진·김대진·최태림
의원 (12명)

1. 제안이유

-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경상북도 내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하여 보건의료 수요 충족을 통한 도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나.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다. 의료기관 위탁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라.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 해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
- 마. 의료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바. 위탁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붙임

- 가. 「보건의료기본법」
- 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다. 「의료법」
- 라. 「국민건강보험법」
- 마. 「의료급여법」
-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5. 관련부서 협의

- 가. 법제심사: 의견반영 (예산입법담당관)
§예산입법담당관-40 (2024.1.9.)
- 나.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요인 없음 (감사관)

§정책기획관-374 (2024.1.9.)

다. 규제 검토의견: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무혁신담당관실)

§정책기획관-374 (2024.1.9.)

라. 해당부서 검토의견: 불임 (보건정책과)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불임

6. 발의의원 서명부: 불임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키기 위하여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취약지”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나.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 공급을 평가·분석한 결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

2. “의료기관”이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의료취약지에 설치하는 「의료법」 제3조 및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환자의 진료

2. 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및 후송 지원

3. 「보건의료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제4조(의료기관 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이하 “위탁운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또는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의료기관 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환자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위탁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 계약 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위탁운영 계약 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의료비) ① 의료기관의 의료급여 및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의료비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따로 정한다.

제9조(관리위탁 등) ① 도지사는 의료기관에 제공된 시설 및 장비(이하 “위탁재산”이라 한다)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관리위탁하게 하거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제4조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으로 하며, 계약 해지 등으로 위탁운영 종료 시 관리위탁도 종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른 위탁운영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위탁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재산의 원상(原狀)을 변경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위탁재산 시설물의 개·보수, 증축 등 업무 및 장비 등 물품의 구입 업무를 수탁자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탁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45조(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

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제10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신설 2020. 4. 7.>

③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7.>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주기적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1. 인구 수, 성별·연령별 인구 분포, 소득 등에 따른 지역 내 국민

의 의료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의료인력·의료기관의 수 등 지역 내 의료공급에 관한 사항

3.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의료기관 접근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 공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분석 결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때에는 부족한 의료서비스의 대상 및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의료취약지(이하 “의료취약지”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에 대한 지원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의 보조 등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취약지 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1. 30., 2011. 6. 7., 2016. 5. 29., 2019. 4. 23., 2020. 3. 4.>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0. 1. 18.>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20. 3. 4.>00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 ~ ⑩ (생략)

□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2. 3.>

1.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심의에 한정한다)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3.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4.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5.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6.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⑥ (생략)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의 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 ⑥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2022. 11. 15.>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관련부서 협의

해당부서 검토의견 (보건정책과)

실·과	주요내용(조항)	검 토 의 건
보건정책과	제3조(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에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 ~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제33조의2에 따른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9. 8. 27., 2020. 3. 4.>

1.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⑤ ~ ⑩ (생략)

제60조(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9. 8. 27.>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지역별·기능별·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9. 8. 27.>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맞지 아니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 와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9. 8. 27.>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3조(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추계
- 제3조(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제2항 제1호~제4호에 따른 의료기관 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추계
- 제9조(관리위탁 등)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무상사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필요한 예산추계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정지원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 보건정책과 지방간호주사 박시연 (054-880-3784)



경 상 북 도



수신 보건정책과장

(경유)

제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보건정책과-545(2024. 1. 5.)호와 관련입니다.
2.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조례(규칙)명	검토의견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조례안은 도내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하여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비용이 수반 될 것으로 추정되나,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는 비용의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의견은 적정함. 다만, 해당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재정수반 사항 발생시,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비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검토 및 예산부서와의 재정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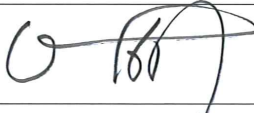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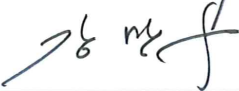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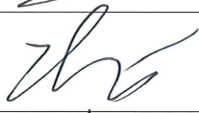






경 상 북 도 지 사

관인생략

주무관 **권오순** 예산총괄담당 **권미숙** 예산담당관 **윤희만** 전결 2024. 1. 8.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384 (2024. 1. 8.) 접수 보건정책과-757 (2024. 1. 8.)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 <http://www.gb.go.kr>
 전화번호 054-880-2153 팩스번호 054-880-2189 / javi271@korea.kr / 대국민 공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가 최적지입니다.


발의의원 서명부

(제명 :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원 명	서명 또는 사인	비 고
박 영 서		
강 만 수		
황 병 강		
김 리 수		
김 일 수		
박 선 하		
이 철 수		
손 희 천		
김 용 현		
홍 기 권		

발의의원 서명부

(제명 :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원 명	서명 또는 사인	비 고
김 대 전		
최 태 권	